

## ▶ 1면에서 이어짐

이 학장은 “새로 생기는 이공계열 학과는 국제캠퍼스에 두는 것이 옳다”며 “더불어 이는 프라임사업의 요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중백 부원장은 “학과를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으나 캠퍼스 간 이동 문제에 대해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부원장은 “신설될 학과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이과대학과 경영학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서울캠퍼스에 설립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대학교육협의회 분류 기준에 따라 국제캠퍼스 편제 아래 두는 것”이라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 국제캠 총학생회와 대학 본부 간의 공방도 있었다. 행정은 캠퍼스 이원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제캠 총학생회 김병경(체육학 2009) 학생회장은 “국제캠 총학생회는 처음 소통위원회를 거치며 학교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프라임 사업을 지지했다”며 “이는 국제캠 총학이 바라던 모습과 프라임사업의 목표가 일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 국제캠 총학 “신설학과, 서울캠에 이공계학과 증설처럼 보여 우려”

하지만 김 회장은 “신설될 학과를 보면 서울캠에 이공계 학과가 증설되는 것처럼 보여 국제캠 학생들은 걱정스러워 한다”며 “신설학과가 서울에 위치만 하고 소속이 국제캠이라면 이원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국제캠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이동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군태 서울캠 부총장은 이에 대해 “학과가 서울캠에서 국제캠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사회과학과 이학계열의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의 정원을 조정해 신설한 것”이라 답변했다. 하지만 국제캠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학자사무국장은 “프라임사업이 이원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으나 학교 측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의 학생들의 여론을 보면, ‘서자 노릇 하는 것도 지친다’, ‘프라임사업 반대 탄원서



국제캠 총학은 “신설학과가 서울에 위치만 하고 소속이 국제캠이라면 이원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국제캠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이동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제출하겠다’ 등의 반응이 대다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 부총장은 “인터넷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도 그것을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온라인 상의 글들이 다수 국제캠 학생들 주장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총학 측으로부터 관련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한부총장은 ‘오늘 자리는 약속을 위한 자리가 아니니 추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김 회장은 캠퍼스 간 학과이동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외국어대학이 올라가고, 국제대학이 올라가는 것은 교지문제 등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안다”며 “4월, 프라임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그 직후 교지를 바로 족량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제캠 총학 측은 프라임사업 이후 캠퍼스 특성화 관련 문제에 대해 구두가 아닌 서류상의 약속을 요청했다.

회의 중 일부 교수들은 학과 이동 논의에 반발하기도 했다. 호텔경영대학 변정우 학장(호텔경영학)은 “단과대학마다 이해관계를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이라며 “캠퍼스 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국제캠 학생대표들의 주장에 이과대학 이기태(생물학) 학장은 “귀가 막혔는지 김 부원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안 들고 있다”는 발언을 내뱉어 주위를 아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 한군태 부총장 “신설학과는 학문간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한 것”

회의 말미 조인원 총장은 “유익한 자리였으며 전체 문건을 보는 것은 본인도 처음”이라며 “마지막까지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총장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서두르게 된 과정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로 양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 원장 역시 “이번 프라임사업을 계기로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우리(미정원)를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미래정책원과 국제캠 총학 측은 22일, 회의 당시 나온 요구안에 대해 추가 협의 테이블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건국대, 총장실 점거 항의도

### 프라임 사업, 타 대학 진행 상황은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프라임 대형 사업 계획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프라임 대형 사업은 2017년부터 3개년 간 매년 1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최종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은 매년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형 사업은 입학정원 10%(최소 100명 이상) 혹은 200명 이상의 정원이 동을 조건으로 하며, 사회 변화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을 선도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수도권 대학으로는 우리학교를 포함해 건국대, 숙명여대, 중앙대가 있다. 서울대나 연·고대, 한양대(서울) 등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가 발표한 프라임사업 가안에는 생명·IT공학 분야의 융합학과 신설안이 포함돼있다. 건대신문에 따르면 300명 정도의 입학정원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 동물생명과학대학의 바이오산업공학과는 2017년부터 바이오시스템공학과(가칭)로 변경돼 이공계열 관련 수업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프라임사업으로 폐지되는 과는 없으며 바이오산업공학과는 폐과가 아닌 개편이다. 설명회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숙명여대는 학칙개정안을 통해 올해 신설된 공과대학을 바탕으로 기존 이과대학이었던 컴퓨터과학부와 나노물리학과를 공과대학으로 이동한다고 공지했다.

학과별 구체적 정원 이동 계획도 발표했다. 학칙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학과를 제외한 기존의 46개 학부 중 40개 학부에서 인원을 감축했으며, 총 323명의 인원이 이동됐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입학정원이 약 2천명이므로 300명의 이동은 약 15%에 해당한다.

중앙대는 공대와 창의 ICT공대를 합쳐 창의공과대학(가칭), 휴먼문화기술대학(가칭), 바이오식품공학대학(가칭)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대신문에 따르면 사회적

수요에 맞춰 이공계열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정원 이동 계획에 대해서는 타 대학과 유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고 있다. 사업 자체가 점수를 책정해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제출 전에 미리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프라임사업 선정평가 항목과 배점을 보면 ‘대학 여건과 학과개편·정원조정 계획’이 42점, ‘교육과정 혁신 및 진로교육 내실화’가 32점, ‘정원감소 분야 대책 및 대학 구성원간 합의’가 6점 등으로, 총점은 100점이다. 그러나 프라임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설명회를 참고해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점수가 큰 ‘정원조정 계획과 교육과정 혁신’(74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상세한 정보공개는 꺼려하고 있다. 우리학교와 중앙대는 구체적 정원이동 계획을 사전 정보 유출 방지를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구성원 간 합의에 대해선 대부분의 학교가 진통을 겪고 있다. 건국대는 지난 1월 10일 프라임사업을 위한 학과폐지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국민대는 지난 3월 22일 학생 800여 명이 프라임사업에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했고, 인하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대학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정보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장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에게 회의 참석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

현재 프라임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정원조정 계획과 교육과정 혁신 항목 등과 관련한 점수는 배점(74점)이 높아 모든 학교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구성원 간 합의’ 6점에서 결과가 갈릴 수도 있다. 지난 주 총장 주재 프라임사업 워크숍에서 조인원 총장은 “프라임 사업 최종안은 모든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프라임사업은 오는 31일 최종 마감 후, 결과는 4월 말 발표 예정이다.

## 우리학교 프라임사업은 어떻게 진행돼왔나

### 프라임사업 진행 경과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 프라임사업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지난 9개월 동안 프라임사업을 준비해온 미래정책원(미정원)을 비롯해 학내 많은 구성원이 이 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프라임사업 계획서 제출이 3일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신문은 지금까지 사업의 준비과정과 관련 논의 등을 되짚어보자 한다.

지난해 7월 우리신문은 대학본부 측과의 인터뷰에서 8월 말 프라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8월 말 미정원 측에 연락을 했으나 9월 초에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고, 9월 초에 다시 “10월 중순에 연락하겠다”며 ‘나중’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프라임사업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지난해 11월 20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은 23일 프라임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게재했다. 당시 양 캠퍼스의 성명서는 공통적으로 논의 과정에 학생대표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측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 12월 중순에는 외국어대학(외대) 교수들이 <캠퍼스 별 특성화와 학문별 통

### 진행 추이

지난해 11월 20일, 23일 서울캠, 국제캠 프라임사업에 대한 성명서 게재

지난해 12월 15일 미래정책원에서 제작한 가이드라인 공개돼

지난해 12월 29일, 교육부에서 프라임 사업 최종 발표 한 달 미뤄

올해 1월 19일 프라임사업 관련 첫 워크숍 열려

3월 16일, 17일 서울캠, 국제캠 각각 제4차 소통위원회 열려

3월 21일 총장 주재 프라임사업 워크숍 열려



지난 21일에 개최된 총장 주재 워크숍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합을 요구한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대 교수들은 “본·분교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당시 대학본부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외대 교수들은 총장과의 대화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학본부의 답은 끝내 없었다.

성명서 이후 지난해 12월 중순 미정원에서 제작한 ‘학문단위 재조명 및 개편 가이드라인(안)’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학교가 ‘모른다’고 답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한 구체성을 갖추고 있었다. 국제캠 총학은 성명서를 통해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현재 남아있는 본·분교 관련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학교 내 갈등만 조장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12월 29일 교육부가 프라임사업 최종 선정을 한 달 미뤄 잠시 대학본부 측과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후 프라임사업 워크숍, 프라임사업 소통위원회(소통위)가 개최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1월 19일 열린 프라임사업 워크숍은 사업의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후 4차례에 걸친 소통위가 개최됐다. 제1, 2차 소통위에서는 ‘신설될 학과의 편제’가 논란이 됐다. 외대 민관동(중국어학) 학장은 “외대는 지금도 인원 부족으로 폐강되는 전공과목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정보대학 이수열(생체의 공학) 학장은 “신설될 이공계열 학과를 서울캠에 배치하는 것은 이원화 캠퍼스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프라임사업 계획서 제출을 10일 앞둔 지난 21일에 개최된 총장 주재 워크숍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국제캠 총학과 대학본부가 캠퍼스 이원화 문제를 놓고 공방이 있었다. 특히 일부 서울캠 단과대학장들은 부주의한 언행으로 참석자들의 눈살을 짚고 만족스러운 워크숍을 만들었다. 조인원 총장은 앞서 거론된 캠퍼스 간 문제에 대해 “풀어가야 할 문제이고, 풀어갈 수 있으니, TF 형태도 좋고, 위원회의 형태도 좋다”며 “미정원 보다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